

월/요/광/장

김유선



푸른 잔디밭. 어머니 자궁 같은 어둠 속에서 어린이가 굴렁쇠 하나만 달랠 들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등장이 아니라 세계이며 우주며 인생이다. 어린이가 위태위태 굴렁쇠를 굴리며 그 넓은 운동장을 가로지르는 광경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처럼 고독하고 불안하고 안쓰럽다.

누가 다시 '굴렁쇠'로 감동 줄까

음까지 닿는 동안 그 행보를 멈추지 못하듯 어린이의 굴렁쇠도 완주를 해야 한다.

그래서 세계는 가슴을 조마조마하며 어린이가 무사히 완주하기를 기도했다. 세계는 굴렁쇠에 감동했지만 우리를 감동시킨 아이디어는 이어령 선생의 창조적 상상력이었다.

허공에 쓴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일행시'는 에펠탑이다. 1889년 제1회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파리가 만들어진 것

이다. 11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기념 건축물이다.

귀스타브 에펠의 이 철강 건축물은 당시 많은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예술의 도시 파리에서 주변 경관을 해치는 철강 소재의 철탑은 파리지엔느들에게 거부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파리가 이 철탑을 고집한 첫번째 이유는

본 1mm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200여만 개의 구멍과 리벳을 만든 빈틈없는 계산, 치밀한 작업이 지반이 약해 불가능하던 철탑을 거기에 있게 했다.

정보의 시대 다음 세대는 감성의 시대라고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정보의 시대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기계는 사람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하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우리의 엔젤 아우라, 감동시키는 에너지의 지수는 얼마나 될까. 어떤 상징물로 새로운 굴렁쇠의 감동을 이끌어낼 것인가.

<장인대 교수·여성문제연구회 회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전봇대' 하나 못 옮기면서 기업유치라니

영암 대불산업단지의 전봇대가 갑자기 이슈로 떠올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각종 규제의 폐단을 지적하며

이 당선인은 "지난 2006년 9월 대불산단에 가 봤는데 전봇대 하나 옮기는 것도 몇 달이 지나도 안 된다고 하더라"며 "전남도, 목포시, 산자부 등이 서로 미루다 보니 전봇대 하나 옮기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불산단의 전봇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입주업체들은 2003년부터 관계기관에 수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지만 예산타령만 하고 차일피일 미뤘다.

반복하고 있다. 한 달이면 굴길 전봇대 때문에 기업들은 5년째 엄청난 시간적·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대불산단 전봇대 문제는 산자부와 한전,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긴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던 관계기관들이 대통령 당선인의 한마디에 현장을 찾는 등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기업인의 투자욕망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업유치도, 경제살리기도 불가능하다.

전봇대 하나 옮기지 못하면서 기업유치가 가능하겠는가. 말로만 기업유치를 외칠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조성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지방혁신도시 건설 차질 없어야

대통령직인수위가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을 추진키로 하면서 혁신도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인수위는 공기업의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 '선(先) 공기업 민영화, 후(後) 지방이전'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막 걸모를 시작한 단계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천명한 공기업 민영화의 대원칙은 혁신도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게 됐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혁신도시는 전국 10곳에 달한다. 정부는 이미 2012년까지 공기업 등 177개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확정, 발표했다.

추진하면 혁신도시 건설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매각된 공기업에 분사 등 지방 이점을 강제할 수 없다.

공주도와 전남도를 비롯 지방자치단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새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및 통·폐합이 총선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4월 이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혁신도시는 차질없이 건설돼야 한다. 특별법까지 제정돼 토지보상을 거의 마치고 건설중이거나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기고

법조칼럼

이현석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하나의 사실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하고 서로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다룬다.

소송당사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자신의 소송행위가 그다지 치밀하지 않더라도 판사가 모든 사실을 다 알 것이라거나,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잘 해라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판사가 소송당사자와 함께 그 사건의 현장을 쫓 지켜보았던 것도 아니고, 경험하지도 않은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도 아니기에, 소송당사자의 기대와는 달리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에 따라 그 주장의 진실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

을 경우에는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어느 한 편 당사자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심증이 드는에도 정작 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증거 없이 판사의 직감만으로 재판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적 진실과 일치하지 않는 결론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차관급 부처로 격하돼 광복회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각 부처별로 중복된 유사한 기능을 통합하고 민간에 넘기거나 하는 정책은 과감하게 넘기는 방식의 개편내용에 대해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갈수록 글로벌화 돼가는 추세 속에서 전문적인 사고와 지식이 필요한 세분화된 정부조직이 필요한 곳도 있을 것이고, 인구가 증가하고 공장이 늘어나는

조성인



가 예우받는 풍토가 다져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었지만, 아쉽게도 부의 승격은커녕 오히려 차관급으로 격하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이 있다. 교육(敎育)은 백년대계(百年大計)로 문화(文化)는 천년대계(千年大計)다. 그런데 보훈(報勳)은 만년대계(萬年大計)다. 이렇듯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보훈처가 부로 승격되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차관급으로 격하된다는 것은 행통을 뒷받침되지 않고 말로만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선열들과 그 유가족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누

보훈처 장관급으로 해야 한다

대 대한 환경대책과 교통, 사건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기회에 국가보훈에 대한 의미와 조직개편 내용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자 한다. 사실 광복회를 비롯한 보훈단체에서는 국가보훈처가 이번 기회에 부로 승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보훈처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민주유공자를 총괄하는 주무부서로서 국가에 공헌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와 민족정기 선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대군인 지원에 대한 업무영역을 넓혀서 명실공히 미국이 나 캐나다, 후자의 보훈부처 조직의 위상에 걸맞은 행정이 펼쳐져서 유공자

가 감히 나라를 지키겠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을 때가 많다.

보훈처의 낮은 위상으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효율적으로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없다. 또한 보훈처의 산하기관인 독립기념관과 한국보훈복지공단 이사장이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산하기관을 통솔하기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미국의 개척정신과 중국의 중화사상 대접받는 원동력이 되듯이 우리도 국가보훈처를 통한 강한 민족정기 업무를 선양해야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유공자가 있었기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다시 같이 상기해보자.

<광복회 광주·전남연합지부장>

출퇴근시간 교차로 신호대기중 만직 말아야

매일 상습 정체구간을 거쳐 출·퇴근 한다. 어느 운전자나 마찬가지로 차가 막히면 답답하다. 교차로에서 가끔 황당한 경우를 겪는데 그 대표적 사례가 신호 대기중 선행차량 운전자들의 행동이다.

최근 출근길에서 있었던 일이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중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면서 차량들이 하나 둘 교차로를 지나갔다.

▲박목월·광주시 남구 봉선2동

졌지 생각하며 5초 정도 기다리고 있을 때 뒤쪽의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댔다. 그때서야 앞 차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내리고 출발하려고 법석을 떨었다.

▲최영자·광주시 동구 신수2동

無等鼓

'관료 조직은 그 역할이나 업무와는 상관없이 항상 사람을 증가시키려는 속성이 있다.'

1955년 영국의 사회생태학자 시릴 노스콧 파킨슨은 '이코노미스트'에 역사에 길이 남을 논문을 실었다. 이른바 '파킨슨의 법칙'의 탄생이었다.

파킨슨은 영국 해군에서 겪은 경험을 관료조직에 적용했다. 1차대전이 한창인 1914년 영국 해군 병력은 15만명, 14년이 지난 1928년 해군의 평시 병력은 10만 명대로 떨어졌고 군함 숫자도 3분의 1로 줄었다.

관료조직은 상비군과 함께 근대국가 탄생의 모태가 됐다. 그러나 관료제는 비민주성·권위주의·경직화·규제일변도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다.

한때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유행했다. 시초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E. F. 슈마허가 1973년 편 책의 이름이다. '규모의 경제'를 지향해온 주류 자본주의 경제학에 대해 인간성 회복을 선언한 책이던 관료 조직에 빗대봐도 의미가 크다.

전통적 의미의 관료제로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사회를 경영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가 유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프랑스 사르코지 정권이나 영국 브라운 정권이 대표적이다. 오죽했으면 사회주의 정권이 중국도 지난 해 후진타오 주석의 주도로 정부 부처 축소에 나섰을까. 그렇다고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조직 개편으로 정부 각 부처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년 뒤 파킨슨법칙의 유행이 차기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 초심대로 하나씩을 지 지켜볼 일이다.

/오주승 사회부장 jsoh@kwangju.co.kr



작은 정부

대졸자 입사 서류에 고교 성적 왜 필요한가

취업 준비생이다. 몇 년째 국가시험을 준비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은 취업을 준비 중이다.

그런데 입사 지원 서류에 고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고교시절 생활태도를 보기 위해서라는데 그 생활기록부에는 내신성적까지 모두 기록돼 있었다.

대학 다니느라 잊고 있었던 고교 성적을 보니 부끄러웠다.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 오히려 취업에 불리할 것도 같아 불안하다.

취업에 최종학적 성적도 아닌 고교 성적이 필요한지 묻고 싶다. 꼭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면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적란은 가려졌으면 한다.

또 주민등록등본 같은 2차 서류 심사 서류는 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등본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개인정보도 담겨 있고 2차에서 떨어지더라도 제출 서류는 반환되지 않아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address.